주간건설 Review

465호 2016.12.1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안전혁신학교 설립
- 포스코건설, 미래도시 만들기 전시회
- SK건설, 저소득가정에 방한용품 전달
- SK건설, 협력사 초청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 송년행사

▣ 건설경제 일반동향

- 적극적 재정역할 요구에도 부진한 공공기관 SOC 재정집행 실적
- 공공 SOC 예산 축소 정책 논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고시
-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법안 논란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반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6.12.10.(토)~2016.12.16(금)> | 제465호 2016.12.16(금)

<업계 동향>

◈ GS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안전혁신학교 설립



GS건설의 싱가포르 T301현장 내에 조성된 안전혁신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현지 근로자들

○ 12월14일 GS건설은 싱가포르 남동부 창이 공항 인근에 위치한 차량기지 건설 공사 T301프로젝트 현장 내에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 이번 안전혁신학교 설립은 싱가포르 도심지 하철 공사 발주처인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이하 LTA) 관계자들이 지난 해 한국 방문 당시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를 견학한 후 깊은 인상을 받아 GS건설에 요청하면서 추진되었음

○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하는 안전 교육 아카데미로 이 곳에서 GS건설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합숙 훈련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 안전혁신학교는 700㎡ 부지에 1개의 강의실과 16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었으며, 16개 체험시설에서는 장비협착, 추락, 낙하, 질식, 감전 사고 등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이뤄지고 있음

○ 싱사포르 안전혁신학교에서는 현재 T301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3회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추후 싱가포르 내 타 현장 근로자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포스코건설, 미래도시 만들기 전시회

○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월13과14일 양일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송도사옥에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 동아리 총 62개팀이 직접 제작한 미래직업 체험 결과물을 발표하는 '미래도시 만들기' 전시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하였음

○ 미래도시 만들기 전시회는 포스코건설이 약 4개월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개발한 자유

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중 하나로, 전시회 첫째 날에만 1,000여명이 방문하였음



미래도시만들기 전시회에 참가한 중학생들

○ 이번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미래직업 체험 활동 교육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전시회에는 IoT존(사물인터넷), 3D존, 에너지존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해, AR(증강현실)·3D 프린터·드론 등 체험 기기들이 전시되었음

◈ SK건설, 저소득가정에 방한용품 전달

○ 12월9일 SK건설은 밀알복지재단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희망메이커 후원가정에 보내줄 방한키트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음


후원 가정에 보낼 방한물품을 들고 기념촬영한 조기행 SK건설 사장(첫째줄 왼쪽 두번째)과 임직원, 에이프릴 멤버들(녹색조끼 착용)

○ 희망메이커는 임직원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SK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날 행사에는 조기행 SK건설 사장과 임직원 80여명, 그리고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에이프릴이 참여하였음

○ 참가자들은 이불, 목도리, 핫팩 등 12개 방한물품과 희망메이커 후원아동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키트 상자에 담았으며, 후원가정에 전달될 6000여만원 상당의 희망키트는 600상자에 이른다고 SK건설은 설명하였음

◈ SK건설, 협력사 초청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 송년행사

○ 12월8일 SK건설은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주요 협력업체를 초

청해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Best Partner Awards)’ 송년행사를 열었음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Best Partner Awards)’ 송년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기행 사장

○ SK건설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연말에 비즈파트너 회사들을 초청해 안전·품질·동반성장 등 분야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2011년 협력업체들과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금융과 기술개발, 교육훈련 지원과 공사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이날 행사에는 조기행 SK건설 사장과 비즈파트너 회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15개 우수업체가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 상을 받은데 이어, 협력업체들로부터 경영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동반성장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였음

◈ 적극적 재정역할 요구에도 부진한 공공기관 SOC 재정집행 실적

○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공공기관들의 SOC 집행실적은 오히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 2017년 경제정책의 Key-word는 확장적 재정정책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한국경제의 난국을 돌파할 해법으로 제시
- OECD는 2017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
-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KDI는 경기 흐름에 다라 필요할 경우 2017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훨씬 더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을 주문

❒ SOC 분야 공공기관의 부진한 재정집행 실적

- 대내외 불확실성 여파로 재정집행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등 SOC 분야 공공기관들의 재정집행률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 2016년도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도 적색등이 켜진 상태

<주요 공공기관별 2016년 재정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실적은 10월말 누계 기준)

구분	2016년 계획	2016년 실적	집행률
국토교통부	373,015	313,759	84.1%
한국토지주택공사	137,714	115,814	84.1%
한국철도시설공단	79,569	53,341	67.0%
한국전력공사	61,552	52,849	85.9%
한국도로공사	36,032	23,848	66.2%
한국농어촌공사	26,243	21,686	82.6%
한국수력원자력	22,405	19,058	85.1%
한국수자원공사	17,731	15,397	86.8%

자료 : 기획재정부(2016년 재정집행 실적은 10월말 누계 기준)

- 이에 따라 12월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각 부처에 연말까지 재정집행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고, 내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연초부터 주요 사업의 예산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공공 SOC 예산 축소 정책 논란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스톡을 비교해 SOC 투자방향을 정하는 현행 예산편성 방식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SOC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SOC투자 축소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2월12일 국토연구원은 'SOC스톡 국제비교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 SOC시설의 투자규모를 정할 때 재정당국이 기준으로 삼아온 국제비교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SOC투자 축소 정책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SOC 확충에 힘써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철도 연장 6위 등 SOC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SOC 예산을 연평균 6%씩 줄여 2020년에는 18조4730억원까지 줄이는 '정상화'조치에 착수

❒ 국회 예산정책처의 SOC 투자정책 평가

-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SOC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가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
-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하는 'G20 국가 중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등의 지표에 대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
- 특히 도로·철도의 절대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도 혼잡률이 높고 정체가 심하다면 당연히 추가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OECD가 행복지표의 하나로 쓰는 통근시간만 봐도 한국은 58분으로 노르웨이(14분), 미국(21분), 독일(27분)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는 것

❒ 국토연구원 보고서 주요내용

- SOC 예산 축소의 근거가 되는 국제비교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
- 주요 비교대상 국가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20(주요 20개국)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자료 집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적용 지표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

- 한국의 고속도로 연장(길이)은 G20과 OECD와 비교하면 각각 1위와 5위로 상위권이지만, 이를 인구 당 연장으로 보면 G20 8위, OECD 21위로 중하위권으로 처지는 결과가 도출되며,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도로 연장 수치는 연도별로 들쭉날쭉하고 지표도 도로 연장 위주여서 확·포장과 같은 다양한 투자형태를 반영할 수 없음
-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시설의 적정성 논쟁을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로하는 SOC 투자정책 마련이 필요
- 교통 SOC시설의 패러다임이 공급량 위주에서 이용자의 만족도 위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측면만을 비교대상으로 고려하는 SOC 정책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땅에 사람과 차가 많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새 지표를 만들어 교통 복지·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평가

<교통SOC에 대한 국제비교의 비일관적인 결과>

지표		OECD 순위 (총 35개국)	G20 순위 (총 19개국)
인당 공급수준	고속국도 연장/인	21	8
	일반국도 연장/인	31	13
	지방도 연장/인	29	15
	총 연장/인	35	18
자동차 보유 대수당 공급수준	총 연장/대	33	18
소득수준별 공급수준	총 연장/GDP per Capital	19	18
국토면적당 공급수준	총 연장/국토면적	20	6
	고속국도 연장/국토면적	5	1
	일반국도 연장/국토면적	6	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턴키 설계심의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

○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부터 적용될 예정

<주요내용>

❒ 개정내용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개정前	**개정後**	적용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3**	당해심의 총점차등 前 적용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총점차등 後 적용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총점차등 後 적용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총점차등 後 적용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신설)**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총점차등 後 적용

❒ 개정 규정의 문제점

- "5.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당초안("들러리 설계" : 설계담합)보다 감점대상 확대(설계담합 + 가격담합)
- 건설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5.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이 확정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감점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부터 적용되므로, 향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감점(10점)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낙찰 불가

◈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법안 논란

○ 지난 7월11일 의원입법 발의(새누리당 김제경 의원 대표발의)된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재심의 예정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는 현행 법률상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주요내용>

❒ **개정안 내용**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
-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 **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종합건설업계)

- 공공과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에게만 대물변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
- 시공 중 발주자의 파산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 없이 대물변제 금지를 강제하는 것을 불합리
-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모두 인정하는 대물변제를 원사업자 파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3의 채권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에 역행
- 시공과정 상황이 바뀌면 현금과 대물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완책도 필요

(전문건설업계)

-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시공한 뒤 기성금을 수령하는데 대물을 받으면 현금 유동화에 큰 어려움 발생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물변제를 악용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있는 한 대물변제 조건을 원사업자 파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반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12월1일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 완료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6.29,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발주되는 장기계속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201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토록 함

❒ 개정안에 따른 종합건설업계 입장

- 국가계약법령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보증금 반환 규정이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발주기관은 없고 입찰불이익 등을 우려해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원사업자가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하다 파산과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 피해액이 남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의 보상금액이 부족함이 많고, 피해액이 잔여 보증액을 초과하면 그 손해는 결국 원사업자가 짊어져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